‘파행’ 제8대 광주시의회, 정상화 합의

주류-비주류, 상임위長 등 보직 배분 이견 좁혀

비주류, 의사일정 보이콧 접고 본회의 참석키로

감투 나눠먹기와 파벌 다툼으로 파행을 빚어온 제8대 광주시의회가 내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 배분에 대해 주류와 비주류 측이 지난한 논의 끝에 기본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쪽 선거’, ‘반쪽 본회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측도 의사 일정 보이콧을 풀고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찬 의장을 주축으로 한 주류측과 반재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측이 수일 간의 걸친 물밑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날 오후 “의회를 우선 정상화시키자”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반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7일 오전 제5차 본회의에 모두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주류측은 그동안 주류측의 승자독식 구조와 임시의장 교체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왔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이후 4차례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정회와 산회 등 파행을 반복하며 개점 휴업을 거듭했다.

주류측 주도로 지난 11일 의장과 부의장 2명이 선출됐으나 ‘반쪽 본회의’에 따른 파행은 계속됐고, 광주시 민선7기 조직개편안 등 현안 처리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다.

여론의 압박과 내부 자성론이 커지면서 주류측은 김 의장을 중심으로 비주류측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이어갔고, 주요 보직에 후보를 내지 않는 식으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는 모양새다.

의장과 1, 2부의장을 주류 측이 모두 가져가는 대신 4개 상임위와 운영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식에 기본적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주류측에서도)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모두 내가 책임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시의장 지위 문제와 선출 절차상 하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주류측은 “법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좋은 쪽’으로 결론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 철회나 소송 포기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시장과 교육감 주요 업무보고, 실·국별 상임위 업무보고, 운영위원장 선출, 예결·윤리위원 선임 등, 지난 5일 간 의회 파행으로 미뤄졌던 주요 의사일정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중진들이 초·재선 길 열어줘야…비인기 법사위 지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원했다며 “일선에서 초선처럼 뛰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원회 배정을 갖고 각 당에서 잡음이 나오니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중진들이 초·재선의원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전문성, 지역구를 위한 상임위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론 의원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지만 초·재선 우선, 다선 의원 비인기 상임위 배정을 불문율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희망자가 없는 상임위가 어디냐고 당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물으니 법사위·환경노동위원회라고 했고 저는 후배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사위를 지원했다”며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 지원자가 없어 제가 ‘법사위 12년’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한 유능한 경제정당 만들겠다”

김진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당대표”를 내세우며 8·25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저 김진표가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저 김진표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작년 촛불의 염원을 담아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평화의 싹을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말은 쉬워도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금융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당·정·청 모두 경험한 경제 당대표, 저 김진표만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 ▲권리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정당 ▲항상 열려있는 스마트 정당 ▲지방정권 교체에 부응하는 강력한 분권정당 등 5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유능한 경제정당과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당·정·청 정례회의를 만들어 정책추진의 속도를 내고 성과 창출을 위해 삼위일체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당, 최저임금 후폭풍에

“솔로몬 해법 없어” 노사 간 양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반발이 거센 데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양보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한 15%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본사 로열티와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형량 추가 ‘관심’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판단이 이번주 한날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특활비 지원을) 관행으로 알았다며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등 20대 총선에 개입하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했거나 전달한 전 국정원장 및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은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12일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